

청년 자산 양극화가 개인의 박탈감을 넘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까닭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
yunkim@korea.ac.kr

청년 자산 양극화는 단순히
소득 불평등의 결과가 아니라 청년
세대의 인생 출발선에서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경고다.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뿐 아니라
상속·증여세의 실효성 제고,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과 공공주택
확대 등 신속한 제도적·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때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층 내부의 자산 양극화는 단순히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문제를 넘어 청년들의 인생의 기회와 사회 이동성을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청년층 내부의 자산 불평등 지표는 다른 세대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청년 가구(가구주 연령 20~39세) 자산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의 평균 순자산은 각각 9억3,022만 원과 2,301만 원으로 격차가 약 40.4배에 달한다. 40세 이상 기성 세대 내 격차(97.1배)보다 수치 자체는 낮지만 청년기에 형성된 자산 불평등이 부모 세대의 자산 상속 등으로 향후 더 심한 자산 불평등 구조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가볍지 않다.

청년 세대 내 평균 순자산 격차 약 40배 달해...

상속,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이 결정적 원인

개인 부채의 질적 양극화도 심각해지고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을 내 투자)', '마통(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을 통해 부동산과 주식을 구입한 청년층과 당장의 생활비와 주거비, 고금리 소액대출에 시달리는 청년층 사이에서 부채의 성격도 양극화되고 있다. 상위층 청년에게는 자산 투자 과정에서 생긴 부채일 수 있지만 하위층 청년에게는 극한 상환 속 감당하기 힘든 부채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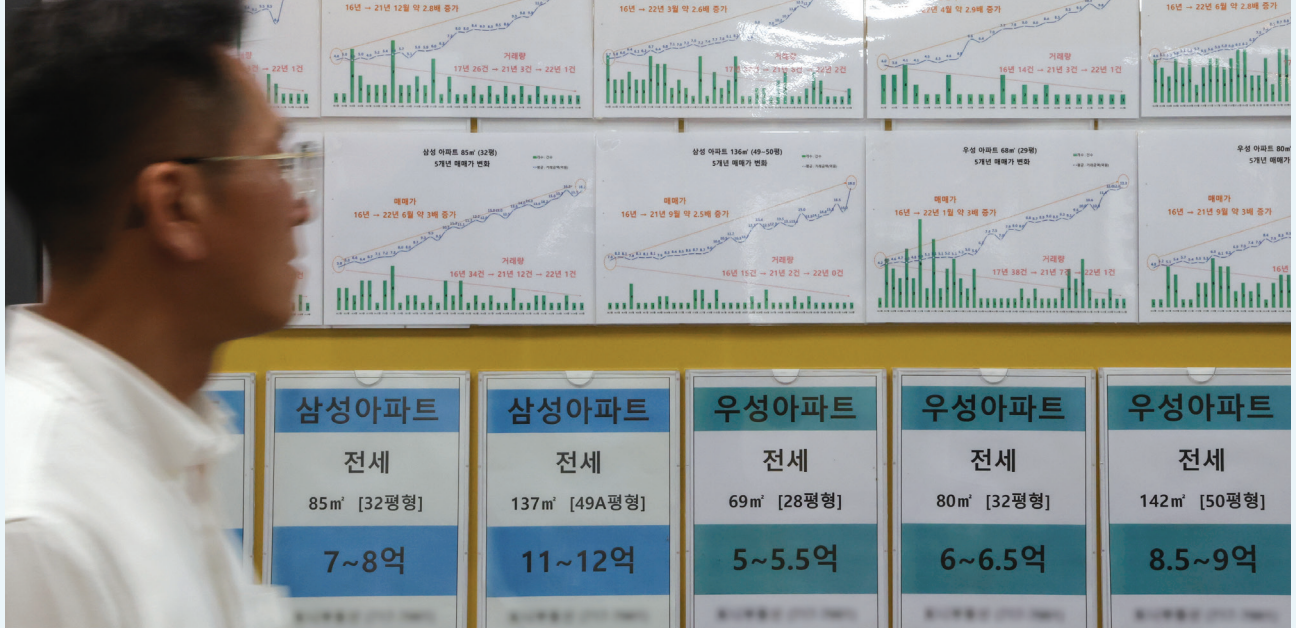
청년 자산 양극화가 심화한 구조적 원인에는 자산의 세습과 자산시장의 폭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이 중첩돼 있다. 이 가운데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다. 부모로부터 수도권 아파트 보증금이나 매매 자금을 지원받았느냐에 따라 자산 격차가 좌우된다.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모 찬스(부모의 재정적 지원)' 없이 혼자 힘으로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부모의 경제력이 인생의 출발선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됐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말한 '세습 자본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재현되고 있다.

부모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도권의 부동산 등 핵심 자산을 조기에 선점한 청년들은 자산 가격 상승의 레버리지를 누리며 기하급수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다. 그러나 자력으로 주거비와 생활비를 조달해야 하는 청년들은 전·월세 보증금이라는 비생산적 자산에 자금이 묶이거나 학자금 및 생활고 대출로 인해 자산형성의 초기 기회조차 박탈당한다. 이는 노력에 의한 성취가 아니라 '수저 계급론'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세습의 전형적인 결과다.

노동시장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커지면서 소득 불평등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청년층 금융자산 특징과 실태 및 시사점」에 따르면 고소득층 가구는 2019년 이후 금융자산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저소득층 가구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2019년 청년층 가구 소득 상위 20% 그룹과 하위 20% 그룹의 금융자산 격차는 약 3.7배였지만 2024년에는 이 수치가 4.7배로 확대됐다.

청년층 내부의 소득 격차는 단순히 소비 수준의 차이뿐 아니라 투자를 위한 종잣돈의 크기를 결정함으로써 자산 격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높은 임금을 받는 청년들은 저축과 투자로 추가적인 자산소득을 마련하지만 저임금 노동시장에 속한 청년들은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를 감당하느라 저축 가능성을 상실해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 격차는 확대된다. 노동소득을 모아 자산을 만드는 속도가 자산 자체의 가치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다.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등 투자시장의 구조적 장벽은 자산 격차를 확대한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 © 연합뉴스

다. 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종잣돈의 유무가 자산 격차를 키운다. 여유 자본이 있는 청년들은 코스피 폭등 시기에 공격적인 자산 증식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자본이 없는 청년들은 투자 기회에서 소외되거나 무리한 대출 투자로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한다.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해외 채권, 토권 증권 등 자산시장 다변화로 금융 지식과 리스크 감수 능력에 따른 격차도 커졌다. 자산 여유가 있는 가구의 청년들은 체계적인 금융교육과 부모의 자문, 자본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이고 다각화된 투자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생계가 시급하거나 금융 정보에서 소외된 청년들은 고금리 적금 외에 대안을 찾지 못하거나 한탕주의식 고위험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파산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노력하면 상향 계층 이동 가능하다’는 능력주의 가치관의 붕괴… 결혼·출산 양극화, 노동 의욕 상실, 계층 간 혐오로도 이어져

청년층 내부의 자산 양극화는 청년 개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역동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과거 한국 사회를 지탱하던 ‘열심히 노력하면 상향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능력주의 가치관과 믿음이 붕괴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1년 실시한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70.4%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또한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꼽았다.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절망감이 ‘노력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무너뜨린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산 양극화는 결혼시장의 양극화로 이어진다. 부모의 지원을 받거나 자산을 선점한 청년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가정을 이루지만 자산형성에 실패한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장기적으로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2023년 0.72명에서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 수준이며 이러한 경향에는 청년층의 자산 양극화 및 주거 불안정이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자산에 따른 부동산 세습이 청년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원천 차단하면서 청년들의 무력감과 저출산 등 사회적 부작용이 극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산 양극화가 가져오는 커다란 사회적 부작용은 청년 세대의 전반적인 노동 의욕 상실이다. 노동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큰 부를 만드는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청년층의 구직 단념(‘그냥 쉬었음’) 현상이 커지고 있다. 열심히 일해도 여차피 집 한 채 살 수 없다는 체념은 취업 동기와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고 조기 퇴사와 구직 단념으로 이어진다.

다른 한편으로 자산 양극화는 청년 세대를 위협한 투기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 자력으로 정상적인 자산형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년들이 가상자산이나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에 극단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청년층 전체를 신용불량이나 파산 위험에 직면하게 만들어 향후 채무 조정과 복지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자산 양극화는 공간적·사회적 분리와 단절을 심화한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말한 대로 사회적 차원의 ‘구별 짓기’를 확대할 수 있다. 특정 선호 지역에 진입한 청년층과 주변으로 밀려나는 청년층 사이에 공간적 장벽이 생기고, 이는 소비 성향이나 문화적 취향의 격차로 이어져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해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 성공한 청년들은 자신이 누리는 자산이 오직 스스로의 노력 덕분이라 믿고, 낙오된 청년들은 구조적 불평등의 피해자임에도 스스로를 자책하며 굴욕감을 내면화한다. 이러한 변화로 사회적 신뢰가 약해지고 단절과 계층 간 혐오를 악화시킬 수 있다.

청년 자산 양극화는 단순히 소득 불평등의 결과가 아니라 청년 세대의 인생 출발선에서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경고다. 이런 현실은 미국, 유럽 등에서도 일어나는 국제적 현상이지만 한국은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부동산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뿐 아니라 상속·증여세의 실효성 제고,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과 공공주택 확대 등 신속한 제도적·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때다. ㉔